

건강과 대안 9월 월례포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반핵운동의 대응과 전망>

발제자: 박준규, 우석균

참가: 김정범, 황자혜, 김규연, 이승홍, 채민석, 백용욱, 김병수, 강병수, 김은희, 박주영, 송윤희, 박선주, 고경심, 장호종, 문현아, 조홍준, 김병수, 정형준, 권현정, 변혜진, 김민정, 최규진, 천명자(약준모)

1) 반핵 아시아 포럼 NNAF(No Nukes Asia Forum) 보고(박준규 발표)

- : 아시아지역 반핵운동의 연대체. 92년 한국 반핵운동의 제안으로 만들어짐.
- : 각 나라별 쟁점이 있을 때, 연대해서 진행. 이번에 1700명, 아시아 주요 나라가 참여.
- : 피난- 후쿠시마 현에서 피난하려고 해도, 관련 사업이나 협력업체들은 남아있음.
- : 현재 7만 명이 이주 상태. 시민단체 추산 200만 명 중 20만 명이 자가 이주 상태.
- :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피폭 문제를 지적.
- : 자원 소방활동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 핵발전소 1호기가 생길 때는 반대나 저항이 없었다가 2호기때부터 생겨남. 이때 공산당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반대.
- : 피폭 66주년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후쿠시마 대회. 아시아의 핵발전소 '수출'관련 쟁점 심포지움, 대량으로 일반인에게 누출되는 일상을 지적. 동경전력회사(TEPCO)까지 행진.
- : 25% 정도 전력을 절약하는 상황(현재 원전 54기 중 39기가 중단된 상황. 지진으로 정지시킨 것도 있고, 9~13개월에 한번씩 원전 멈춤.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야 다시 재가동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아 많이 멈추게 됨. 계속 가동승인 안 하면 내년 5월까지 모두 멈춤. 그렇다면 탈핵의 가능성 있음)이지만, 답지 않음. 역설적으로, 이전에 과잉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에너지절감은 가능하다!

2)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응 (우석균 발표)

- : 사람들이 피난가면서 피폭.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방사능도 움직임 "사람들이 달리는 길로 바람도 달렸고 방사능도 달렸습니다."
- : 피폭 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피난하라고 해서 피난 이후 오히려 피폭강화된 사례있음.
- : ICRP 권고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기준 이상.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방사선 민감도가 큼. 사실상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상황. 국내 난민이 40만명으로 추산.
- : 식품오염으로 인한 피폭.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면 80~95%가 식품 피폭. 이는 실제로 내부피폭.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부피폭이 5~20%. 그러니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부피폭에 불과함. 특히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등의 생산품, 식품이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시즈오카 찾아서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일본소 와쿠도 문제. 세슘뱃질을 먹이는 데 봄 건이 세슘에 오염. 가격 폭락하고 오염물질 배출. 그렇다면 이 오염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농업의 먹이사슬 전체가 붕괴됨을 의미.
- : 원전피해복구 노동자들의 방사능 피폭은 보고되는 바가 거의 없음. 이들 대부분 비정규 노동자임. 또한, 피난민들은 결국 고향에서 재복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피해본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다시 재복구를 위해 일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

: 세습방출양으로는 정부 보고로만 히로시마 원폭의 168.5배라고 발표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얼스터 대학교 크리스 버스비 교수는 약 100만 명이 앞으로 사망할 것이며, 히로시마보다 72000배 많은 피폭량이라고 주장함.

: 일본정부는 방사능 정보 은폐. 고리야마시에 살고 있는 마스모토 모리코 "저는 딸 둘의 엄마. 사고 전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는지 몰랐다. 저는 45세이므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제 중학교 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도쿄에 가 있는데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방사능 기준의 완화 및 근거없는 안전성 주장고수. 의사들이 안전하다고 말해서 의사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큼. 후쿠시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코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지역 소아과 의사가 괜찮다고 주장.

: 피해보상 회피와 지연. 동경전력은 쓰나미가 원인이라고 피해배상 책임 회피. 실제로 건강이나 생활상의 피해를 입거나 자발적 피난을 떠난 사람들 보상받지 못함.

: 대피의 문제

: 사회운동의 역량

: 새로운 노다 수상, 2030년까지는 원전 계속, 탈원전은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월간 춘추에 기고함.

: 9월 19일 대중집회를 잡아놓은 상태, 도쿄 5만 명 규모 집회 예상

: 최근에 원전에 대해 발언한 연예인은 출연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음.

3) 질의응답 및 토론

Q1: 원수금, 원수협은 어떻게 다른가?

=> 원수금은 사회당계열이고 원수협은 공산당이 속함. 노조도 있음. 중국의 핵보유에 대한 입장에서 나뉨. 원수금은 사회주의국가에서 핵 가져야 한다, 원수협은 원전반대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입장이었음.

Q2: 250 밀리시버트 이상에서 피폭되어 사망한 사람 두 명이 보고된 것 외에, 저용량 피폭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어떠한가?

=> 자료가 별로 없어서 거의 알 수 없음. 방사선 디텍터를 처음에 다 안 달고 들어갔다고 함. 일정 수치가 넘으면 알리는 경보기가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뺐다는 이야기도 있음. 달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250을 다 채워서 교체해야 된다고 했다는 게 7월 말쯤 상황임. 그럼 250 다 채운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름. 최근에 밝혀진 것이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기사임. 정보 문제에서는, 지도를 보면 바다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하지 않음. 그런데 일부 자료에 의하면 바다쪽으로도 일부 검사. 만일 지도에서 거울반대효과를 생각하면 바다쪽의 오염은 더 심각할 수도 있음.

Q3: 원전의 제한성을 지자체가 좌우하는데, 이런 지자체 중심의 결정 구조가 문제있는 것은 아닐지? 한국도 고리 원전이 문제가 되면 월성, 서울, 중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지역주민만 회유하거나 여론몰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함. 만일 대피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원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봄.

=> 체르노빌의 경우가 좀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일본은 지역이 한정됨.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도 "이주'시킬 수는 없고"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단체들도 있음.

Q4: 후쿠시마현의 주민들을 비롯해서 피해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의 심리치료나 주민치료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가?

=> 지자체별로 피난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음. 그런데 일본 정부는 기준치를 높혀 놓고 "안전한데 왜" 라는 방식으로 대응함. "1밀리 시버트를 지향하겠다"라는 정부 답변만 있음. 그러니 피난온 사람들에게 대한 지자체의 자체 대응이 거의 맥시멈인 상황. 분명히 수치를 보니까, 자연방사 0.15가 나오는데, 한국은 0.2.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0.25, 역에서 내려가서 후쿠시마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0.75.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1.2. 그러니 (ICRP기준치의)11배 정도 됨. 방사능이 정말 무색무취무향임을 실감함. 그나마 쓰던 마스크도 조금 있다가 벗었음. 후쿠시마 사람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하지 않음. 집회참가자 중 몇 사람, 아이들은 다 마스크를 했음. 시위에 참가한 아이는 단 한명. "우리 자녀의 미래에 안전과 안심"이라는 구호를 들고 있었음.

Q4: 일본의 NGO상황은 어떤가? 네트워크에 시민사회단체로 연결된 단체들이 없나?

=> 우리는 원수협, 원수금만 만나고 온 것이고, 지구의 벗, 그린피스, 피스보트 등 활동은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자금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라고 할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듯함. 혼시 교지 선생에 따르면 일본은 그간 원폭문제에서 단위로 '시버트'를 단위로 했음. 시버트 가지고 따져가며 피해보상을 논했는데 지금은 미리시버트, 마이크로시버트 단위 논의라서 제대로 논의가 안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함.

책방가면 수많은 '핵사고 진실과 거짓' 이런 책이 쏟아지고 엄청 팔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비해 구체적인 뭔가 대책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시위나 운동은 너무 적었음. 자료나 정보는 쌓여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는 여전히 과제. 또, 상당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 단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현실. 대중화되거나 폭 넓어보이지는 않았음.

Q5: 나가사키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음. 작년 히로시마 분위기와 비교해서 분명 달랐d,a. 지역에서 서명을 받아 썩 받아온 분위기는 자못 고무적.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분명 후쿠시마사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대응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원폭반대와 원전반대는 동시적인 구호였음.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도력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므로 원수금 대회만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수협 대회를 하는데, 일본에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음. 원수금은 나날이 줄어드는데, 원수협은 커지는 것 같음. 원수협은 원전 제로를 불리고 홋카이도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음. 그가 "내 한몸 바쳐 이 세상 핵을 없애는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발언하니 큰 박수를 받고 지지받는 분위기였음.

일본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죽어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도력의 문제가 아닐지? 분위기는 있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Q6: 원폭이 터지고 시민들이 직접 원폭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10년쯤 지나서부터임. 미국이 비키니 실험을 하고 그걸 기점으로 "천만명 선언"을 하고 사회당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음. 핵의 무서움을 분명히 일본사회는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5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허용했다는 것은 결국 체제 내에서의 운동이 아니었나 싶음. 시민사회가 다 허용했다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상당히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만

큼 이제 원폭에 대해 발언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 전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 체르노빌 때는 사실 제대로 조사 안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번 일본은 분명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할텐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임. 아이들이 갑상선암이 생겨도 그 원인을 찾기 쉽지 않고, 피해가 일상적이므로 상황이 드러나도 일본 내에서 이것을 '운동'으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피해증후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서 구축할 가능성은 희박함.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서서 구축을 할 것임. 민의련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아마 10년 내에 의미있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이나 미국 의학잡지에는 후쿠시마 이야기가 제법 실리는데, 한국 잡지에 실리는 건 못 보았음.

특히 풍문피해문제도 심각함. 후쿠시마 라이온스 클럽에서 “언제까지 자숙할 것인가?” “풍문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호를 내걸 정도로 후쿠시마 지배계층도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임.

4) 정리

박준규: 내년에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있다고 한다. 3월 말에. 거기서 대응하는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반핵아시아포럼 단위에서는 반핵아시아포럼은 이걸 한국에서 하자 얘기가 있었고 이걸 세계대회로 넓혀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기획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연대하고 행동할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우석균: 반핵운동을 한국의 모습을 보면, 일본과 크게 다른 모습을 띠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화되어 있고, 퍼포먼스 중심이고... 한국 반핵운동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반핵운동에 민감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 지역운동만이 아니라 전체적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고민들이 중요하고 이런 반핵쟁점을 꾸준히 파악할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운동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끝>